

산자부, 청정생산기술 개발에 300억 지원

산업자원부는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 생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모두 300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한다고 지난 5월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6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 가스 최소화 및 재이용기술, 전자통신 기기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한 환경친화설계 기법 등 총 17개 분야 63개 기술이다.

산자부는 염색, 도금, 주물 등 환경문제 및 환경비용 부담이 심각한 업종의 생산체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업종의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개발 투자 2배로 늘린다
에너지 절약시설 사용자 세제혜택 등**

산업자원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부문 등에 대한 투자를 내년부터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호 산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 시설 사용자에게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이다.

산자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 또는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은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수 재이용률 따라 부과금 감면

7월부터는 기업들이 산업폐수를 재이용하는 만큼 부과금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방류수 수질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을 초과한 폐수의 재이용률에 따라 기업에 물리는 기본부과금을 최고 80%까지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폐수의 재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폐수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88개 업소가 총 6억1천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폐수 재이용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율은 10%(폐수 10-20% 재이용시)에서 80%(폐수 80%이상 재이용시)까지이며, 일일 폐수배출량 50t 이상인 업소 3천700개가 이 인센티브제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부과금 감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조만간 지역별로 총 24개의 대형업체를 시범 선정, 해당업체의 폐수 처리 과정과 부과금 감면 혜택 등을 소개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금 감면 제도를 통해 오는 2006년까지 폐수 재이용률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면서 "이 계획이 성공하면 수자원 절약과 함께 수질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황산가스·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8월부터 최고 3배 올려**

환경부는 지난 5월 26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최고 3배 이상 강화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황산가스는 현행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에서 0015ppm 이하로 24시간 평균치는 0014ppm 이하에서 004ppm 이하로, 1시간 평균치는 025ppm 이하에서 012ppm 이하로 각각 2~3배 강화된다.

또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 80 μ g/ m^3 이하에서 70 μ g/ m^3 이하로 기준이 높아졌으며,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납 기준도 연간 15 μ g/ m^3 이하에서 05 μ g/ m^3 이하로 3배 강화된다.

대기배출 허용 기준 강화, 일제 반발

정부가 최근 황과 질소 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유, 전력, 철강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4년을 목표로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개정하면

서 황화물 배출량 최소 기준을 120ppm 가량에서 70-80ppm 수준으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최소 250ppm 가량에서 150-200ppm 수준으로 각각 낮추기로 잠정 방침을 정했다.

관련 업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이런 방침이 시행되면 일반 보일러의 경우 황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무려 67% 이상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제는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이 이들 선진국보다 더 강화되도록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이미 강화된 규제 수치를 맞추기 위해 1조2천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다시 강화된다면 1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게 돼 전기 요금을 10% 이상 인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오염 물질 대기 배출 기준을 우리나라는 매 4년마다 강화해 오고 있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자주 개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2007년으로 연기하든지 규제 기준을 다소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온산공단 환경기준 대폭 강화

환경부는 공해가 심한 울산지역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울산·온산공단의 중금속과 유해 물질에 대한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엄격 및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울산·온산공단 입주업체 및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마쳤으며 빠르면 오는 2001년부터 시행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카드뮴 화합물의 경우 배출업소의 소각로 배출허용 기준을 새로 짓는 시설에만 1ppm 이하로 규제해 왔으나 기존 시설도 포함시켜 모두 소각 용량에 따라 0.2-1ppm 이하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납 화합물은 소각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이 없었으나 기존 및 새 시설 모두 소각용량에 따라 0.2-5ppm 이하로 구분해 강화하고 크롬 화합물도 소각로의 새 시설 만 1ppm 이하였던 것을 기존 및 새 시설 모두 0.5-1ppm 이하로 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구리 및 아연 화합물은 새 시설에만 10ppm 이하를 적용했으나 기존 시설 10ppm, 새 시설 5ppm 이하로 바꾸어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가스상 물질인 암모니아는 화학비료 제조시설의 경우 기존 및 새 시설이 50ppm이하에서 30ppm 이하로,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은 각각 70ppm 이하에서 기준은 40ppm, 새 시설은 30ppm 이하로 크게 강화된다.

소각시설 배출허용 기준이 400ppm 이하였던 일산화탄소는 소각 용량에 따라 기존 및 새 시설 모두 50-300ppm 이하로 적용받으며 이황화탄소도 새 시설만 30ppm 이하였던 것이 기존 시설 15ppm, 새 시설 10ppm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최근 울산·온산공단안 배출업체, 울산지역 환경보전협의회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며 적용 시기는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02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울산지역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각시설의 배출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시켰다"고 밝히고 "그러나 규제를 받을 경우 환경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울산지역 일부 배출업체 들의 반발도 심하다"고 말했다.

**절수기기 성능검사인증 실시
기존 1회 방식 개선...수도협회 성능 검사 주관**

현재 한 번에 그친 절수기기 성능검사가 연중 상시로 검사시기가 변경되고 성능검사 주관도 환경부에서 한국수도협회로 바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2일 절수기기 개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성능검사 인증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수기 성능검사 운용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변기 등의 절수기기 검사가 한국기기유통시험연구원에서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성능검사 주관도 종전 환경부에서 수도협회로 변경, 관련업계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성능검사 결과는 수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소비자들의 구매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생태계 훼손한 만큼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개발사업자들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훼손한 생

태계의 면적만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재배를 통해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반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www.megokr)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亂)개발 방지 등 효율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조항 및 GMO 환경위해성 평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계 훼손 정도를 평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차등 부과하는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생태계 복원 및 대체자연 조성을 통해 자연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납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방침이다.

지난 97년 8월 첫 도입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폐 결정으로 그 동안 사문화 되었다.

환경오염 권위업체 자율로

경상북도는 지난 6월 12일 공해물질 배출업체가 스스로 환경을 관리하는 '자율환경관리제'를 도입,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관리 능력이 있는 대형 업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오염사고가 없었던 △동국제강(강) 포항공장 △흥덕스틸코드(주) △발레오 만도전장시스템코리아(주) △남양유업(주) △(주)코오롱 김천공장 △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본부 등 6개 업체를 자율환경 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날 자율 환경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안전처리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은 함유 폐형광등이 앞으로 분리수거해 안전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형광등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분리수거 및 별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형광등 제조업체들과 이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폐형광등을 형광등 제조업체들로 구성되는 가칭 '폐형광등재활용협회'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형광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안전의식은 희박한 상태"라면서 "주민홍보를 통한 분리수거, 제조업체들에 의한 별도 처리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효율 광촉매 공기정화기 개발-제1발사시스템

기존의 광촉매시스템보다 광촉매 효율이 2배이상 향상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제거용 광촉매 공기정화기가 국내 연구진과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 재단이 지난 97년 지정한 선문대학교 공조기술연구센터의 김학수(金學秀)교수 연구팀과 환경관련 중소기업인 제너럴시스템(대표 송길홍·www.gscoo.kr)은 가정용이나 솔벤트등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광촉매 공기정화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광촉매시스템은 광촉매 반응과정 중 산화반응을 이용, VOC등을 상온에서 무해한 이산화탄소 물 등으로 산화시킨다. 또 내부공기의 순환시간을 기존보다 늘여 내부 온도를 보다 적은 에너지로 원하는 온도에 유지시킬 수 있다. 김교수는 기존의 광촉매가 보이는 저효율의 단점을 보완, 광촉매 시스템에 광전자 분리기술을 혼합해 같은 전기 소비로 광촉매 효율을 약 2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제너럴시스템은 산업용 대규모 처리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고 내년 이 부문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태국 등 동남아수출과 함께 20조원에 달하는 세계 광촉매 시장에 대규모 해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기반기금(환경분야)추가지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2000년도 산업기반기금(환경분야)추가지원을 받는다.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의 운전 및 시설자금,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의

운전 및 시설자금(염색공단 폐수처리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등 총 650억원이 지원된다. 년 75%(단 기술담보 사업은 8%),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02)369-7811

폐어망, 오폐수정화에 재활용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폐어망을 이용한 오폐수정화기술을 개발해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폐어망을 이용한 단독 정화조 효율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단독주택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을 기존방법에 비해 20%이상 개선했다고 지난 5월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화조에 자갈을 깔아 분뇨를 정화시켰지만 폐어망을 이용한 기술은 미생물의 성장을 활성화시켜 오염도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 정화조의 경우 여름철 방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저감률이 25.8%였지만 폐어망 정화조는 46.3%에 달했다.

또 겨울철에는 일반정화조의 BOD가 오히려 146% 증가했으나 폐어망 정화조의 저감률은 29.4%로 나타나는 등 하수처리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공해 방지시설 투자 계속 감소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체들의 공해방지시설 투자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기업시설투자 동향에 따르면 99년 조사(43개 업체 응답)에서 98년 공해방지 시설 투자실적은 6천797억원으로 97년 9천53억원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387개 업체 응답)에서는 99년 공해방지시설 투자실적이 3천540억원으로 전년의 4천759억원 보다 26%나 감소했으며 올해 투자계획 역시 3천93억원으로 작년보다 12%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98년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여서 전체 시설투자총액이 34.1%나 감소하면서 공해 방지시설 투자도 함께 줄었으나 99년에는 경기호전으로 시설투자 총액은 8.3% 증가했고 올해에도 24.2%나 늘어날 계획인데 반해 공해방지구

지는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환경지수 IMF 4대 대 최소

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환경 여건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85년부터 98년까지 14년간 대기, 수질, 자연자원, 폐기물 등 4개 분야의 환경변화를 계수화 한 '한국의 환경종합지수'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5년을 100으로 할 때 수치가 내려갈수록 환경이 개선됐음을 나타내는 환경종합지수는 96년에 92까지 떨어진 뒤 97년에 97로 다시 올라가 환경이 나빠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98년엔 93으로 떨어져 환경이 개선됐음을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대기의 경우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먼지 납의 오염도가 낮아지면 서 97년에 59까지 떨어진 뒤 98년엔 57로 더 낮아졌다.

자연자원지수는 산림자원의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97년 88까지 떨어졌고 98년엔 84로 하락했다. 수질(4대강 기준)은 94년 이후 계속 나빠져 97년 131까지 수치가 치솟은 뒤 98년엔 123으로 떨어져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훨씬 웃돌아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기물도 97년 113까지 올랐다가 98년엔 108로 낮아지는 했으나 여전히 100을 웃돌아 자원 재활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소 · 화학공장 유해물질 관리 강화

세탁소, 화학공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유해물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내 세탁업체와 화학산업에서 연간 2800톤과 1만2000톤씩 사용되고 있는 PCE(퍼클로에틸렌)와 TCE (트리클로로에틸렌)가 다량 흡입될 경우 중추신경계 기능을 저하, 현기증 · 두통 등 인체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방류벽 · 반침접시 등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냉암소 등에 유해물질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고에 대비해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의 비치를 의무화시켰다.

**DMZ 원경조사 등 급진전 가능성
남북정상 환경분야 협력 합의·산림복구도 대상**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남북정상회담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추진 가능한 환경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남북간 가능한 환경협력사업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금강산 등 산림보전, 화재·홍수지역 산림복구, 두만강 등 수질개선, 철새 이동경로 조사, 황해오염조사, 국립공원 협력사업 등이 꼽히고 있다.

가장 현실성 있고 북한에 실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인 산림복구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주도로 이미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북한 산림복구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평화의 숲'(이사장 강영훈)은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북한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지난 6월 15일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자연보전을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전돼 있는 비무장지대는 연구가치가 높은 데다 양측 모두 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우선 사업 중 하나로 채택될 공산이 높다. 남북 비무장지대 생태 공동조사에 합의할 경우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더라도 빠르면 올해 안에 공동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이 지속돼온 국립공원 협력사업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과거 북한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고 솔잎 흑파리 방제 등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시베리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날아오는 황새 등 철새의 이동경로조사 또한 관심은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중·일 3국 중심의 동북아 환경협력 체제에 북한을 참가시키는 방안, 개발 및 공장증가에 따른 황해오염 실태 조사, 수자원 이용 및 수질보전협력 방안 등도 남북간 대화 진전에 따라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불합력"
환경부 관계법 시로 상충·부담금 기피 빌미 제공**

환경부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불합리하게 운영, 부담금 기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시설, 건축물을 신·증축해 오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30대기업, 환경친화기업 지정 외면

정부가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경제단체도 '환경경영현장'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정작 대기업들은 환경마인드의 실질적인 잣대가 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이란 제품을 생산할 때 기업이 제품 설계와 원료조달, 생산 공정, 사후처리 등 모든 생산과정에 대해 스스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뒤 오염물질을 줄이는 계획이나 방법을 세워 정부의 승인을 얻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5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환경친화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곳은 모두 108개. 하지만 현대, SK, 한진 등 30대 대기업 중 상당수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경우 35개 계열사 가운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계열사는 현대자동차 아산·울산공장 등 3개에 불과하다. 또 SK그룹은 39개 계열사 가운데 (주)SK, SK옥시케미칼(주) 등 2개사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았고 한진, 롯데, 대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과거 폐놀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두산은 16개 계열사 중 전자·맥주 등 89%에 달하는 11개사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장 우수한 '그린 그룹'으로 거듭났음을 입증했다. 또 LG는 43개 중 정유·산전 등 23개(53%), 삼성은 45개 계열사 중 전자·코닝 등 18개(40%), 한화는 23개 중 7개(30%)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환경우수그룹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중에는 녹십자, 유한킴벌리, 한독약품, 한국비스프 등이 환경친화기업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다량 쏟아내는 재벌기업

들이 환경보전의 기능자가 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외면하는 것은 아직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 시스템 95.5% 양망

우리 나라 하수처리 시스템의 95.5%가 불량 및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슬러지는 부족한 처리방안이 없어 앞으로 또 하나의 환경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8년 말 현재 전국 112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무려 74%인 83개소의 유입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00ppm (mg/l) 이하를 기록했다.

더욱이 전체의 17%인 19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의 BOD는 40ppm 이하였다.

하수종말처리장의 BOD 수치가 평균치인 100ppm 이하라는 것은 오염된 생활하수와 빗물이 처리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노후된 하수관을 통해 밖으로 그대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되면 주변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높다.

유입수의 BOD 수치가 100ppm을 넘는 29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서도 부산 해운대 등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 및 축산폐수를 하수와 함께 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하수 및 빗물만 처리할 경우 100ppm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재 하루 평균 4천643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양도 오는 2003년에는 약 14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하수슬러지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하수슬러지의 90% 이상은 매립 또는 해양투기되고 있다.

1회용품 · 과대포장 신고시 포상금

1회용품이나 과대포장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제도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1회용품 규제위반 행위나 과대포장 적

발시 즉시 이행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 6월 5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도 3개월까지 이행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제도가 정착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사업장폐기물 투기신고에 대해 포상금지급 대상을 확대시킨 데 이어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사례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밖에 관련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해 1회용품 규제대상을 10평 미만의 매장 및 약국, 서점, 세탁소 등까지 확대해 1회용품의 감량효과를 높이고 업소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넥스, 산업로공업조합 업무제휴

에넥스(대표 박유재 · 朴有載)가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과 중소형 소각로 유해가스 저감장치 공급에 관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지난 6월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넥스는 조합 및 100여개 회원사들에 소각로 유해가스 저감장치를 제조, 공급하게 된다.

에넥스는 이번 계약체결을 통해 5000여기의 개·보수 대상 소각로에 이 저감장치를 장착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에넥스가 공급하게 될 제품은 중·소형 규모의 소각로 유해가스 저감장치(모델명 IGR20-SI)로 전국 1만3000여개 소각로의 개·보수와 신규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넥스 관계자는 "올 10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기존 소각로에 유해가스 저감장치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형 고가제품인 기존 설비와 달리 중소형 규모의 저렴한 저감장치를 개발, 조기보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